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53개 대기업) 및 1차 협력사(213개사)를 중심으로 ·

2013. 7

목 차

< 요약 >	5
I. 조사개요	7
1. 조사목적	7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7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7
4. 조사내용	7
II. 조사결과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8
1. 동반성장지수의 시행효과	8
2.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8
3.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11
III. 시사점 및 보완과제	12
1. 조사결과의 시사점	12
2. 보완과제	13
< 별 첨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인식과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	14

■ 이 자료는 사업팀 이도영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490

FAX : 02-3771-0143

E-mail : ldy@fkilsc.or.kr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5. 14 ~ 2013. 5. 22(9일간)
- 조사대상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53개사) 및 1차 협력사(213개사)
 - 대기업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사(53개사 응답, 응답률 73.6%)
 - 1차 협력사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개사의 915개 1차 협력사(213개사 응답, 응답률 23.3%)
 -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66개사 중 61개사에서 제출한 11,273개의 1차 협력사 중에서 무작위로 15개 협력사씩 선정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기업 확산을 위한 지수 보완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에 대한 인식 등

2. 조사결과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인식과 보완과제

- 2012년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동반성장과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효과에 공감하나, 기업부담이 늘고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상당수임
 - 지수평가기업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확대’(38.7%), ‘과도한 자금 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6.4%),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15.1%), ‘대·중소기업간 협력 시너지 저하’(13.2%) 順으로 응답함
 - 반면, 협력사는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28.0%),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확대’(26.1%),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19.0%),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9.8%) 順으로 의견이 많음
 - 다만, 지수평가기업은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6.4%)을, 1차 협력사는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19.0%)을 차순위로 꼽아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지수 시행효과에 대해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기업 확산을 위해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는 기업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과 인센티브 확충의 방향으로 현행 지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는 현행 지수의 보완과제로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46.2%, 32.8%),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7.4%, 28.4%)을 가장 많이 꼽음
- 지수평가기업과 협력사 모두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행 지수의 대안

모델로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을 꼽음

- 지수평가기업은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37.7%),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30.2%) 순으로 대안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반면, 협력사는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22.9%),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18.8%) 순으로 대안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지수가 시행된 이후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 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 등 동반성장에 주력해왔음
- 그 결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동반성장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둔 반면,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고 서열위주의 발표방식으로 동반성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 이에, 본 센터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를 파악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수 보완과제와 대안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2012년 지수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함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 조사주관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조사대상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72개사) 및 1차 협력사(915개사)
 - 대기업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사
 - 1차 협력사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사의 915개 1차 협력사
-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72社) 중 61社가 제출한 11,273개 1차 협력사 중에서 무작위로 15개 협력사씩 선정
- 응답률 : 대기업 53개사 회신(응답률 73.6%), 1차 협력사 213개사 회신(응답률 23.3%)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객관식 설문조사(이메일과 전화조사 병행, 일부항목 복수응답 가능)
- 조사기간 : 2013. 5. 14 ~ 2013. 5. 22(9일간)

4. 조사내용(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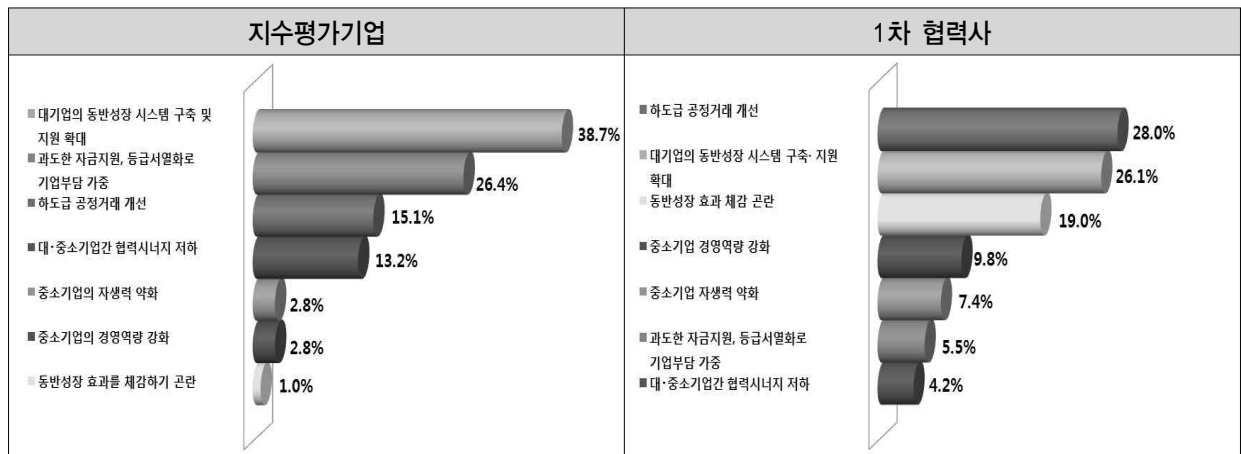
-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기업 확산을 위한 지수 보완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등

Ⅱ. 조사결과: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1. 동반성장지수의 시행효과

- 2012년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동반성장과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효과에 공감하나, 기업부담이 늘고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상당수임
- 지수평가기업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확대’(38.7%), ‘과도한 자금 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6.4%),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15.1%), ‘대·중소기업간 협력 시너지 저하’(13.2%) 順으로 응답함
 - 반면, 협력사는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28.0%),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확대’(26.1%),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19.0%),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9.8%) 順으로 의견이 많음
 - 다만, 지수평가기업은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6.4%)을, 1차 협력사는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19.0%)을 차순위로 꼽아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지수 시행효과에 대해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동반성장지수 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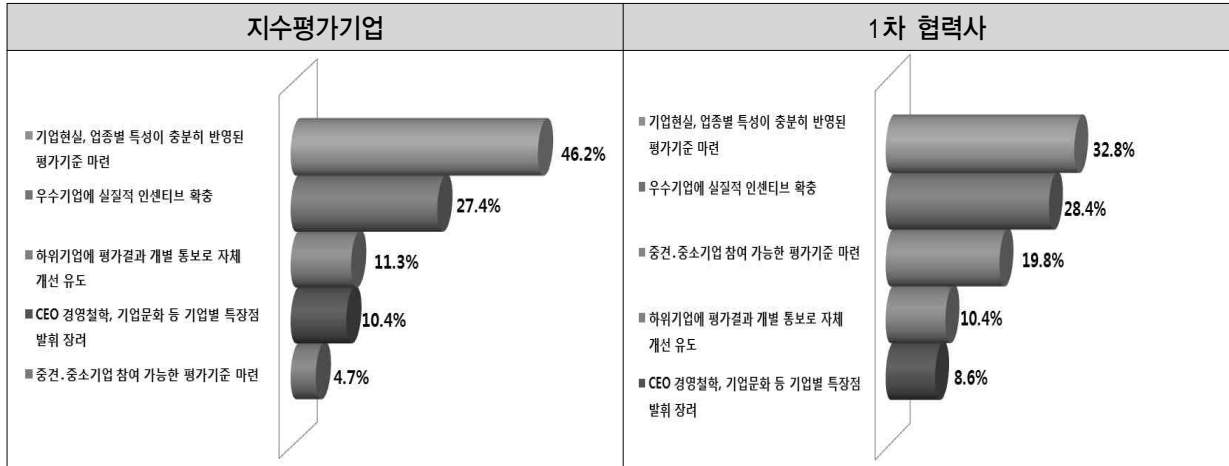


2.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기업 확산을 위해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는 기업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과 인센티브 확충의 방향으로 현행 지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는 현행 지수의 보완과제로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46.2%, 32.8%),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7.4%, 28.4%)을 가장 많이 꼽음

- 또한, 지수평가기업은 ‘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11.3%), ‘CEO 경영철학과 기업문화 등 기업별 특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 장려’(10.4%) 순으로 응답했고, 협력사는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19.8%), ‘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10.4%) 등의 응답분포를 보임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지수 보완과제>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불충분한 기업의 사례>

- ☐ **현행 협약기준과 같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자금 지원 규모를 설정할 경우, 매출은 늘었으나 업황 악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한 기업들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들 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임**
 - (사례1) 건설업체 A社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원도급사의 재무여건 악화를 겪고 있으며, 동종업계 B社도 영업이익률과 자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라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
- ☐ **건설·조선·철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수주계약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며, 최종 판매가격 및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발주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이 일반 제조업보다 어려운 실정임**
 - (사례2) 2011년도 56개 지수평가대상의 업종별 수주계약 비율은 전기·전자 38.97%, 화학·비금속·금속 36.5% 등 30% 내외이나, 건설업은 89.9%, 조선·철도제조업은 99.7%로 타 업종보다 50%p 이상 수주계약 비율이 크게 높음
- ☐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全社 매출을 자금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기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사례3) 화학업종의 지수평가대상으로 선정된 C社는 화학, 중공업 등 다수의 업종을 사업부제로 운영 중이며, 화학부문은 전사 매출의 60% 내외 수준임. C社가 사업부제 형태가 아니었을 경우, 자금지원 목표는 현재의 60% 수준에 해당되나, 전사 매출기준으로 자금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40%의 지원 부담이 늘어남
- ☐ **건설·조선·철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수주계약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며, 최종 판매가격 및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발주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이 일반 제조업보다 어려운 실정임**

- (사례4) 56개 지수평가대상의 업종별 수주계약 비율은 전기·전자 38.97%, 화학·비금속·금속 36.50% 등 30% 내외이나, 건설업은 89.93%, 조선·철도제조업은 99.70%로 타 업종보다 50%p 이상 수주계약 비율이 크게 높음

- 조선·건설·철도제조 등 수주산업은 계약시점부터 최종 목적물의 공급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금지급기일을 적용할 경우 현금흐름(Cash-Flow)에 영향을 미쳐 경영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음

- (사례5) 수주산업이 아닌 대기업에 비해 수주산업의 대기업은 연간 판매대금 회전횟수를 의미하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절반에 그침¹⁾. 특히, 2012년에 지수평가 결과를 발표한 56개사 중 52개사의 경우 비수주산업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수주산업의 대기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2012년 56개 동반성장지수 발표기업의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입채무회전율>

구분	비수주산업(2011)	수주산업(2011)
매출채권회전율(A)	6.64회	3.03회

- 홈쇼핑은 고객이 주문한 이후 취소·반품 기한이 통상 30일 이내까지 허용하므로 취소·반품 허용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을 협력사에 先지급하기 어려움

- (사례6) 홈쇼핑 업체 D社は 방송전별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주문취소·반품 비율이 10%를 상회함

- 현행 협약 평가기준은 판매수수료 결정 및 판촉행사 결정시 매 건마다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협력사와 사전협의 이력을 남겨야 하나, 기업현실과 맞지 않음

- (사례7) 홈쇼핑 업종은 방송분량 1시간 내외의 단위로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20~30건의 계약과 방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매 건마다 이메일과 공문으로 이력을 남기기 위한 업무부담이 많음. 따라서, 사전 판촉행사신청서 또는 계약서 등 합의사항이 담긴 증빙자료로 협의 이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24시간 영업금지 및 월 2회 일요일 휴무)으로 판매실적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협력사의 매출도 동반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협력사의 매출확대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은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 협약평가에서 제외해야 함

- (사례8)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전년 매출액 대비 약 10%인 3조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력사의 매출도 이에 비례하여 하락하는 것이 필연적임

- 건설·유통 등 전속거래 비율이 낮은 업종은 동일한 협력사가 다수의 지수평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인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함

- (사례9)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영세기업이 많아서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건설협회는 관련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체감도 조사대상을 5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표본을 이의 5배수 제출토록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협약 이행효과에 대한 체감을 묻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사례10) 비제조업종의 대기업 E社は 협력사가 2012년 체감도 조사표본 제출 수량인 150개사에 못 미쳐 거래비중이 낮거나 비하도급 관계로 협력관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협력사들까지 조사표본으로 모두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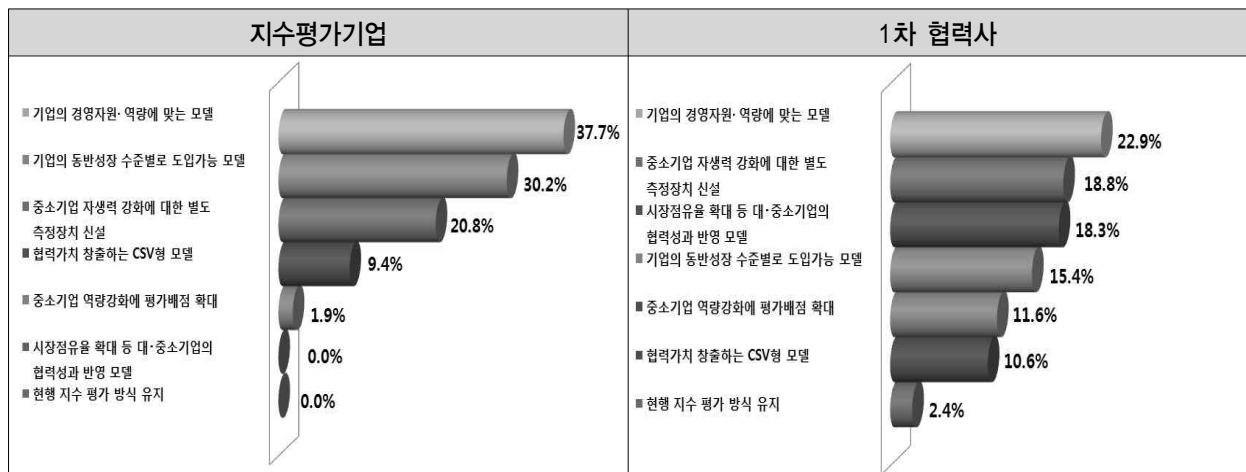
- 반면, 제조업종의 대기업 F社は 체감도 조사표본 제출 수량의 수배에 달하는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계약기간, 매출액의존도 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체감도 조사표본으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체감도 평가가 잘 나온 것을 결과 발표 후 뒤늦게 파악한 E社は 평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호소함

3.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 지수평가기업과 협력사 모두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행 지수의 대안모델로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을 꼽음

- 지수평가기업은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37.7%),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 별로 도입가능 모델’(30.2%) 순으로 대안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그밖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20.8%), ‘협력가치 창출하는 CSV형’(9.4%),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평가배점 확대’(1.9%) 순임
- 반면, 협력사는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22.9%),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18.8%) 순으로 대안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협력성과 반영 모델’(18.3%),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15.4%),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평가배점 확대’(11.6%) 등의 대안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에 대한 기업인식>



1) 매출채권회전율이 낮을수록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구분	제조업 대기업 부문(2010)	수주산업(2010)	
		조선업	건설업
매출채권회전율	7.56회	3.86회	3.07회

출처 :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Ⅲ. 시사점 및 보완과제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는 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도급 공정 거래 수준이 개선됐다는 데 공감하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음

○ 지수평가기업은 경영부담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좋은 평가결과를 받기 위해 각 업종에서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 하지만, 지수평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공개함에 따라 동반성장에 불성실한 기업으로 낙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지수평가기업 :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지원 확대(38.7%)>자금지원, 등급서열화로 기업부담 가중(26.4%)>하도급 공정거래 개선(15.1%)>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저하(13.2%)>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중소기업 자생력 약화(2.8%)

○ 반면, 협력사는 동반성장 효과 체감이 곤란하다는 점을 부정적인 효과로 응답한 기업이 다수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임

- 대기업은 기술력,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이 앞선 유망 중소기업에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설비투자 등 지원을 주력하는 것이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므로, 역량이 취약하여 전략적인 중요도가 낮은 협력사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협력사 중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 일부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할 수 있음

* 1차 협력사 :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28.0%)>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지원 확대(26.1%)>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19.0%)>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9.8%)>중소기업 자생력 약화(7.4%)> 대·중소기업간 협력 시너지 저하(4.2%)

□ 지수평가기업과 협력사 모두 현행 지수에 대해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업황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분야에 대한 니즈, 하도급 거래비중 등의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기업들은 현행 지수의 평가기준이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됨

* 지수평가기업 : 기업현실,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46.2%)>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7.4%)>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11.3%)>CEO경영철학, 기업문화 등 기업별 특징점 발취 장려(10.4%)>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4.7%)

* 1차 협력사 : 기업현실,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32.8%)>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8.4%)>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19.8%)>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10.4%)>CEO 경영철학, 기업문화 등 기업별 특징점 발취 장려(8.6%)

□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현행 지수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현실과 역량에 맞는 모델 개발에 대한 요청이 많음

○ 주요기업 간에도 매출액 규모가 크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기업별로 다 다르나, 현행 지수평가 방식은 이들 기업을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중견기업 등 기업규모가 작은 업체들까지 지수 참여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수평가기업 :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37.7%)>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30.2%)>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20.8%)>협력가치 창출하는 CSV형 모델(9.4%)

* 1차 협력사 : 기업의 경영자원·역량에 맞는 모델(22.9%)>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18.8%)>시장점유율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협력성과 반영 모델(18.3%)>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15.4%)

2. 보완과제

□ 단기적으로는 지수시행 이후 3년차를 맞아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동반성장과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을 돕는 지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기업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가 저해되지 않도록 현행 지수를 보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수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보완과 더불어 현행 지수 보완과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대안모델 개발이 필요함

○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기업규모별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수준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행 지수는 대기업에 획일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하위그룹의 기업이나 비제조업종의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나, 현행 지수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려움

- 따라서, 주요 업종별로 기업규모나 기업별 동반성장 추진수준 등에 맞게 단계별 이행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기업이 각사의 여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한 이후 매년 점차 난이도를 높여 나가는 스텝업 방식의 대안모델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단계별로 기업경영 실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수 평가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기업인식과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5. 14 ~ 2013. 5. 22(9일간)
- 조사표본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72社) 및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915社)
- 대기업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72社중 53社 응답, 응답률 73.6%)
- 1차 협력사 :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1차 협력사(915社중 213社 응답, 응답률 23.3%)
-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72社) 중 61社가 제출한 11,273개 1차 협력사 중 무작위로 15社 선정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확산을 위한 지수 보완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지수대안모델에 대한 인식 등

1. 동반성장지수 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복수응답)

구분		대기업의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지원 확대	하도급 공정 거래 개선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	자금지원 등급 서열화로 기업부담 가중	대·중소 기업 간 협력시너지 저하	중소기업 자생력 약화	동반성장 효과 체감 곤란	합계
대기업	응답률 (%)	38.7	15.1	2.8	26.4	13.2	2.8	1.0	100.0
1차 협력사	응답률 (%)	26.1	28.0	9.8	5.5	4.2	7.4	19.0	100.0

2.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기업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복수응답)

구분		기업현실,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	CEO 경영철학, 기업문화 등 기업별 특징점 발휘 장려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	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	합계
대기업	응답률 (%)	46.2	10.4	27.4	11.3	4.7	100.0
1차 협력사	응답률 (%)	32.8	8.6	28.4	10.4	19.8	100.0

3.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복수응답)

구분		기업의 경영자원 ·역량에 맞는 모델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평가배점 확대	협력가치 창출하는 CSV형 모델	시장점유율 확대 등 대·중소 기업의 협력성과 반영 모델	현행 지수 평가 방식 유지	합계
대기업	응답률 (%)	37.7	30.2	20.8	1.9	9.4	0.0	0.0	100.0
1차 협력사	응답률 (%)	22.9	15.4	18.8	11.6	10.6	18.3	2.4	100.0

참고문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3) “자율적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보완의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2013) “한국형 동반성장의 넥스트 패러다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자발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개선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은행(2010),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3) “주요 기업·1차 협력사, “기업현실과 역량에 맞는 동반성장지수 대안 개발해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3)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10곳 중 9곳, 등급별·상위기업만 공개해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